

‘농정 로드맵’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농어민부담경감대책”이 만들어지고, “농업·농촌발전 대책”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가 예외 없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투융자 지원하고, 개방으로 줄어드는 농민의 소득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고, 농촌개발을 활성화하고, 농촌복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대책의 이름도 멋을 내어 ‘농정 로드맵’이라고 바꿨다.

이번 대책을 만드는데 정부로서는 ‘성의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급하게 되었고, 내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농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10년간 국고 119조원(지난 10년에는 국고 62조원과 지방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계획을 마련했고, 과거 어느 종합대책보다 실속 있게 융자(23%)보다는 보조와 투자(77%)를 많이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예산은 금년 6700억원에서 매년 늘려 5년후에는 2조6천억원으로 잡혀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마련한 부채경감대책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리대출자금과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과다부채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농민을 위해 경영회생자금 2000억원도 마련했다고 한다. 농어민복지특별법, 농특세연장법, FTA

이행특별법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4대특별법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안된 농협 개혁문제를 빼고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성의를 다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농연 집행부는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을 51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추세로 보아 늘어날 예산 45조원(2004년 8조4천억 원에서 조금씩 늘어난 수치)에 비해 겨우 6조 원 더 늘린 것으로 이런 정도로는 어려운 농민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과연 ‘로드맵’이 제시한 대로 5년 후에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농민이 도시근로자만큼 잘 살게 되고, 우리 농촌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아마도 정책의 대상인 농민들도,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도,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도 ‘로드맵’이 제시한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은 명백하고 또 큰 데 비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와 직접지불 예산이지만 그것도 ha당 또는 가구 당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이 기백만원을 넘기기도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늘어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지원이 좀더 늘어난다 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농의소득도 정부가 '계획한' 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정부가 더 큰 성의를 보인다해도 세금으로 농민을 잘살게까지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잘해야 경영위험을 줄여주고,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도일 것이다. '잘살기' 위한 소득은 농민 스스로 이런저런 부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 벌어야 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전업농민의 주된 소득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작규모가 작은 우리 농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기술농업을 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시스템을 갖추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보다 자연조건이 좋지 않고, 인건비가 높은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명성을 날리는 것은 그들의 농업과학기술, 그들의 수확 후 농산물 취급기술 및 유통시스템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최고 품질의 농산물은 최고 수준의 농업과학기술을 가져야 생산할 수 있고, 생산자들이 '하나로' 협동하여 '상품'을 출하해야 적은 비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우리 농업의 기술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농업과학기술과 유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전략과 전술이 나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산업을 시작했을 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의 기술격차는 농업기술의 격차보다 컸으면 컸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정부가 반도체산업발전을 주도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예산과 제도정비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가졌다고 농업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유통시스템을 주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품목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정부의 속성은 획일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개발해 주어봤자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농협이 나서서 자기 고장의 농산물을 팔아준다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대형매장을 설치한다고 유통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양돈이면 양돈,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사육하는 농민들이 뿔뿔 뿔쳐서 자기들이

선택한 대학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고, 한발 더 나아가 수출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매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의 대형마트가 외국으로 구매선을 탐색하기 전에 우리의 생산자조직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한다. 특히, 초기단계에는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등을 낭비적이라 할 정도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조합 중심의 현재의 농협체제 아래서 농민들이 품목별로 스스로 조직화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이 '한 마음'으로 협동하여 모든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비홍보를 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적자 나는" 경제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돈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재의 농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농협의 방대한 인적 자원과 막대한 재산이 농민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전의 모든 "종합대책"이 그랬듯이 참여정부가 성의를 다했다는 '로드 맵'도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을 잘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잘살게 하지는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농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득의 밑바닥을 채워주는 역할이나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소득은 농민이 경영을 통해, 시장을 통해 벌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농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한농연 회원들이 펼쳐 일어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정부는 농촌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외에 우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야말로 성의를 다해 도와주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농업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인농연**